



#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십시오

배 포 일	2022. 4. 5.	사진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type="checkbox"/> 매수 : 3 매		
담당	균형발전연구실 통일·북방연구센터	집필자	양 철 책임연구원	yangchul@rig.re.kr 033-250-1346

##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 강원연구원,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 가능성 검토 보고서 발간

- 강원연구원(원장 직무대행 김석중)은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 보고서(통일·북방정책포커스 제22-1호)를 통해 분산된 국방부의 통합에 대비하여 강원도가 국방부를 유치하고, “국방”과 “경제특별자치도”를 연계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직무실의 국방부 이전으로 국방 관련 조직이 연쇄적으로 이동하지만, 기능 통합을 위해 국방부가 용산을 떠날 것이며, 용산을 대체하여 “국방수도”가 될 수 있는 최적지가 강원도라고 분석했다.
-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강원도에 공약한 “경제특별자치도”가 무슨 경제인지,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방”을 “경제특별자치도”와 연계하여 “국방경제”의 관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또한, 강원도가 수도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 3대 광역권과 연계하고, 수도권 인근에 강소도시의 잠재력을 갖춘 중소도시가 있다는 점에 “중소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하여 5대 광역 메가시티에 연계” 한다는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 이와 함께, 국방부 이전에 필요한 부지와 미래형 훈련체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는 기존의 미활용 군부지를 활용하여 이전 비용과 인프라 조성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 보고서는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에 관한 제약요인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 행정안전부 이전 사례를 통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경제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국방부 이전 포함,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제정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농촌진흥청과 해양경찰청이 각각 전주와 인천으로 이전한 것과 같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를 제시하며 국방부의 강원도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적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양철 책임연구원은 “법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국방’ 과 연계하여 ‘경제특별자치도’ 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유익하고, 이전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정보게시판 (<http://www.rig.re.kr/front/report/researchBoard/boardList.do>)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

첨부. 통일·북방정책포커스 제22-1호(“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